

남약신도시의 형성과 미래

문화향기

박관서
시인
무안학연구소장



깜짝 놀랐다. 현재 진행 중인 무안군사(務安郡史)에 포함될 남약신도시 르포를 쓰는 중이었다. 원래 남약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앞에는 대죽도와 소죽도라는 섬이 있었다. 죽도(竹島)라는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들이 있다.

특히, 전라남도 도청이 들어서게 된 공간 선택의 논리와 주요 여론의 하나가 오룡산과 대죽도 사이의 오룡쟁주(五龍爭珠) 형국에 관한 것이었다. 앞으로 영산강을 향하고 뒤에서 남약리를 품고 있는 오룡산(225m)은 노령산맥의 끝자락에 솟은 명산이다. 예전에는 주룡산(駐龍山)이라고도 불린 오룡산은 산자락에 용(龍)자가 붙은 상룡, 회룡, 오룡, 용포, 용계마을까지 다섯 개의 마을을 품고 있다. 서울의 북악에서 흘러온 기맥이 무안의 주산인 국사봉을 거쳐 오룡산의 남악에 이르러 다시 양쪽에 승달산과 유달산 그리고 앞으로는 월출산을 거느리고 눈앞의 여의주(대죽도)를 물고 돌아서면(회룡리) 하늘로 승천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약신도시 곳곳을 답사하다가 현재는 중앙공원이 되어 있는 대죽도

를 유심히 관찰하던 중 오삼석(吳三錫, 1670-1734)이 대나무 화살을 만들었다는 안내판 문구를 보았다. 그래서 관련 문헌을 찾아 남약리의 대표 성씨인 해주 오씨 후손을 만나 남약리의 깊은 역사와 그 현장을 찾아보게 되었다. 해주오씨의 재가인 용강재(龍岡齋)와 문중 묘역이었다. 이는 오룡산 북쪽 끝 나지막한 산자락에 있었는데 남약리 초입인 안동마을 언덕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역사로서의 남약리와 정신으로서의 남약신도시 형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먼저 남약리에서 유일하게 문중재가이 현전하고 있는 해주오씨의 입향조인 호조판서를 지낸 오숙기(吳淑奇, 1548-1604)와 관련된 설화와 역사적 흔적이었다. 약 400여 년 전인 임진왜란 이후 영광에서 무안 남약리로 장가를 온 오숙기가 달성배씨 부인의 기지로 달성배씨가 문힐 묘역에 부친 오윤의 묘지를 옮겨서 가문의 발복과 함께 남약리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용강재와 그 옆의 해주오씨 선산 묘역을 살펴보면, '효암달성배공휘정운지묘(孝庵達城裴公諱正潤之墓)' 곧 달성배씨인 배정운은 물론 그 옆에도 다른 달성배씨 세천(裴世天)의 묘와 묘비가 있었다. 단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주오씨의 묘역에 달성배씨의 묘역이 현재까지 섞여 있었고, 이를 다시 문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래 무안군 삼향면은 향소부곡이 있던 곳으로 임성부곡, 극포부곡, 군

산부곡이 있어서 삼향(三鄉)이라고 불렀다. 삼향에서는 특산물인 신우대를 이용한 대나무 화살촉을 만드는 부곡마을이었다고 한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삼향전죽(三鄉箭竹)"을 궁궐의 후원에 심기 위해 전라도 관찰사에게 50포기씩 캐어 보내도록 하고, 궁중에서 각종 행사 때 상품으로 하사되고, 가장 굳세고 강하여 온 나라에서 쓰는 화살대가 모두 삼향에서 나온다고 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487년에 전라도관찰사였던 김종직이 읍은 「금성곡」 12수 가운데 7수에서 '삼향의 대화살이 천하에 소문났으니, 주석돌과 단은이 진기할 것 으랴'라는 내용으로도 거듭 확인된다.

그리하여 오숙기의 증손자인 오삼석은 대죽도와 소죽도를 매입하여 당시 임진왜란 등으로 혼란한 나라의 국방강화를 위하여 대나무화살을 만들어 나주목에 상납하였다. 이에 나라에서 상을 하사하려고 하였으나 "대화살은 국가를 방비하는데 필요한 물건이어서 헌납한 것인데, 어찌 보상을 바라겠는가!"라고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는 남약신도시의 형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성씨와 입장과 삶의 형태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물과 육지가 그리고 깃발과 해조음이 어우러져 이뤄진 간척지(干潟地)였던 '물안골 곧 무안'의 문화지리적 정체성이었다. 물론 이러한 융합의 정신에서 남약신도시를 비롯한 무안의 미래를 찾아볼 수 있겠다.

社說

광주군공항이전 입 연 전남지사 '새 국면'

김지사 "무안공항 활성화 연계"

김영록 전남지사가 7년간 담보상태에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전날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지역개발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적인 비전이 담긴 확실한 꾸러미를 내놔야 한다"며 "전남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광주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준다면 충분히 지역민들을 설득해낼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무안군민들도 잘 판단해야 할 시기고, 결국 무엇이 지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만 무

안군민의 뜻을 저버린 김영록 도지사의 발언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함평군 등 전남 일부 지자체의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김 지사의 발언 시기와 배경을 놓고 지역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도내 지자체가 나왔고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두는 등 크게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점은 늦은 감은 있지만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단체장은 지역민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자신의 입장과 정책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지역민을 설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대구시가 관내 군공항을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으로 이전을 성사시킨 것도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이 비록 지역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는 진통을 겪더라도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를 기대한다.

화정아이파크 해체에 HDC 명운 달렸다

서구 '5월 철거' 조건부 승인

지난 해 외벽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된 광주 현대산업개발(HDC)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전체를 허물고 재시공하는 것도 사상초유의 일이지만 지상 39층의 초고층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지금도 진행중인 부실시공의 폐해를 겨울 삼아 2차 피해가 없는 안전한 철거를 기대한다.

2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를 마친 HDC화정아이파크 해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지난 23일 조건부 승인했다. 서구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이 6~7톤에 이르는 잘린 코어와 기둥 무게를 견디면서 지면으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지 인양 능력을 검토했다. 철거시 파편과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해 건물 3개 층에 설치하는 '해체형 이동 작업대'와 건물 벽체간 적정 거리와 안정성도 검토했다. 해체 중장비를 건물에 올릴 때 지지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안전 거리 확보 사항 등도 점

검했다. 특히 서구는 안전한 철거를 위해 HDC측에 10여 개의 서류 보안을 요구했다. 쇠파이프로 수직 하중을 분산시키는 '잭소프트'를 해체하면서 이를 어떻게 반출하겠다는 계획과 해체를 위해 상층부로 올라가는 굴삭기의 동선에 맞춰 적정 안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서구는 보안이 완료되면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HDC는 8개 동 전체 철거에 앞서 시스템 비계 설치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말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HDC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비롯해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 등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잃었다. 서구와 관계 당국은 HDC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큰 인명 피해와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까지 부실공사가 불러오는 폐해는 이미 HDC가 보여줬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HDC가 추진할 이번 철거 과정이 HDC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의회 밖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대국민 성명을 통해 "내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사법 개혁 입법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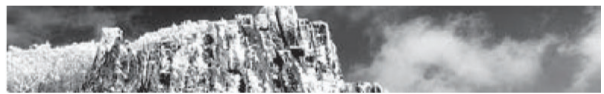
예루살렘=AP/뉴시스

서석대

"엄중하고 긴급한 상황이다."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 미셸 칸드쉬 총재가 급하게 한국을 찾아왔다. 아시아에 번지던 외환위기가 한국까지 밀려 오면서 우리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날 밤,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칸드쉬 총재와 IMF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사실상 경제적 자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처럼 빨리 부자가 된 나라가 없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이런 굴욕을 경험한 나라도 흔치 않다." 당시 과정을 지켜봤던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다.

IMF는 우리 경제를 살린 희망이었다. 국가 부도 직전 21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해 우리 경제를 극적으로 회생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정부는 1998년은 3개월마다, 그 다음 해부터는 6개월마다 정책 협의를 구실로 IMF의 '숙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온갖 굴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였고 성장률부터 금리정책까지 모든 경제적 결정도 IMF의 승인이 필요했다. 기업의 생사여탈권도 가졌다. 실업·부도·신용불량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도 실의와 좌절에 빠져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허울 좋은 편법을 들고 나온 IMF는 극심한 구



조조정을 요구했다. 기업의 고용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파견직, 기간제 등으로 바뀌었다. '평생직장의 시대'도 사라졌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다' 직장 내에서의 갈등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규직이 줄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면서 '노·노 갈등'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겨났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각자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합리적인 임금과 근로 시간이다. 속출하는 급식실 산재 등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하고 있다. 급식실 종사자와 돌봄 교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월 권리(휴식권)'와 '적정임금 보장'은 헌법적 가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특정 직군의 희생을 담보로 지탱되는 사회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올해로 26년. 위정자들이 강요한 '노동의 하향평준화'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를 지탱하는 이들의 노동 의욕을 위협하고 있다.

이용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